

“재난적인 위기 시대, 복지 해법을 제시하다”



심포지엄 1주제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창립 45주년을 맞아 ‘재난적 위기 시대의 복지’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6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인원을 제한했으며, 사전에 참가 의사를 밝힌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산재단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1979년부터 매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창립 45주년을 맞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겪은 어려움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제기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배려, 존중과 같은 정신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주제는 김순양 영남대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 2주제는 남재현 부산대 교수의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

론, 그리고 최재성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교육 불평등 문제에 정책적으로 대처해야

김순양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교육 환경과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교육을 책임져 온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학교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대면수업에서 이뤄져야 할 사회성 교육과 상담, 관찰에 한계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나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저학년의 학습 효율이 크게 떨어졌고, 자녀 돌봄과 학습 지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교육 불평등 격차가 더욱 커졌다. 또 취약계층의 경제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 격차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더욱 심화됐다.

김 교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교육당국, 지자체, 학교, 민간교육기관, 지역단체 등이 협력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매권을 정부가 구입해주는 교육 바우처 같은 준시장방식을 도입해 학생 개개인의 교육수요에

맞게 대응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과 학습 지원을 받아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정소연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중·고등학교 별로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표출됐는지를 다루는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준시장방식은 한 번 도입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우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장치로 공공부문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전제하고 EBS 수능연계 확대와 인터넷 강화 활용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강화를 통해 교육과 돌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을 제시했다.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목표 설정 필요

남재현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응방식은 국가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사회보장이 두터운 국가에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실업과 고용 문제를 해결한 반면,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대규모로 현금이 지급됐다. 남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에 실증적 근거가 반영되지 않아 빈곤층 지원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노인가구의 소득분배는 좋아졌지만 한부모가구는 나빠졌다. 저소득층, 1인 자영업자, 모자가구는 소득분배가 악화됐지만 미취업가구는 오히려 개선됐다. 남 교수는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취약계층마다 달랐다”며 “지원의 목적이 불분명해 생겨난 모순으로 정책 목적과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경제적 도움을 주려는 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가 극대화되고, 후속조치에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의 소득보장 방식이었고 2차 이후의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피해보상 방식이라, 정확한 효과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상이한 정책목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일률적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1인 자영업자, 한부모가구의 피해가 컸던 것은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장소득의 악화가 진정되는 시점에는 구체적인 피해계층을 특정해 지원하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심포지엄 주제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참가자들이 함께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취약계층의 삶의 안전 지키는 정책 마련돼야
패널토론에서는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전체 발표자와 토론자,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교육 불평등 문제와 대안,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복지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향후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약계층의 삶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글 편집부